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영어권국가의 이해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o 과제유형 : (공통) 형

o 과 제 명 : Brexit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서술

(다음의 3가지 주제를 총 “3단락”으로 나누어 모두 작성하되, 본문은 총 4매 내외로 작성)

- 목 차 -

1. BREXIT의 배경 -----	1
2.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	1
3. BREXIT의 향후 전망 -----	3
· 참고문헌 -----	4

BREXIT의 배경

요즘 BREXIT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BREXIT란 영국을 뜻하는 'Britain' 과 탈퇴를 뜻하는 'exit' 의 합성어이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를 선택했다. 탈퇴 찬성 비율은 51.9%(1741만 742표)였다. 그러면 왜 영국은 유럽공동체인 EU와 결별을 하기로 했을까?

Brexit에는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993년 Maastricht Treaty를 기초로 유럽의 경제 공동체인 EU가 발족되었다. 이 조약으로 EU 내에 단일 화폐인 유로화가 도입되었고, 경제 외에도 외교 및 안보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이다 보니, 각 지역별로 정치적인 불안요소가 많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영국의 문제점들을 EU 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반면, 정치적·경제적으로 EU의 규제 및 간섭이 많아지다 보니 영국 국민들은 EU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실제로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75년도에도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가 이뤄진 결과, Shetland Islands와 Outer Hebrides를 제외한 영국 전역의 대다수 행정구역에서 찬성표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영국은 EEC 회원국으로 남게 되었다.” (위키 백과)¹⁾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2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보수당의 총리 David Cameron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Brexit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자신이 약속한 공약대로 2016년에 Brexit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실행에 옮긴 Cameron 총리조차도 EU 탈퇴라는 결과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보수당의 당론으로 EU 탈퇴를 주도했지만, Cameron 총리 자신은 그 후 영국이 계속 EU에 잔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영국은 EU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기에 EU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 막대한 구제 금융을 지원했고, 이러한 구제 금융으로 인해 EU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분담비용이 증가하자, 영국 내에서는 분담금만 늘어나고 규제만 일삼는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영국은 다른 EU국가와 달리 유로가 아닌 자국의 화폐인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이런 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각종 범죄 및 테러가 증가하고, 이민자들로 인해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마저 줄어들자 EU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들이 독일에 의해 주도되는 것 또한 영국민 입장에서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탈퇴 투표자의 절반은 “영국에 관한 결정은 영국에서 내려져야 한다” 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72)

“정치적 논쟁으로 시작된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 전역에 걸쳐 계층, 지역 및 세대 간의 분쟁으로 번졌다. EU 가입으로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본 산업·업종의 종사자, 그리고 이러한 산업·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브렉시트 찬반이 갈라졌다.” (최순영, 브렉시트의 배경과 향후 전망)

BREXIT의 현재 진상상황

국민투표에 의해 EU 탈퇴가 결정되자 영국은 혼란에 빠졌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그 전날에 비

1) 「브렉시트」 :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A0%89%EC%8B%9C%ED%8A%B8> (2019/3/24). 『위키백과』

해 10% 이상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금 현물은 가치가 치솟았다. 지역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탈퇴 의견이 많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EU 잔류 의견이 높았다. 영국민 사이에서도 내가 무슨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투표하자는 여론이 일어났고, 급기야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리그렉시트(Regrexit, Regret + Brexit)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후폭풍이 거셌다. 투표 후의 여론이 이렇게 되자 보수당의 Cameron 총리는 국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Theresa Mary May 총리가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정부는 EU와 탈퇴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17년 3월 29일에 시작하여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에 완전 탈퇴하는 일정이었다. EU의 헌법으로 불리는 Treaty of Lisbon에 따르면 탈퇴 협의 시작 후 2년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다. 영국과 EU는 20개월 동안 브렉시트 협의를 마련하고, 2018년 11월 25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의 May 총리 외 27명의 EU 회원국 정상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 후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9년 1월 15일 안건 상정을 했으나 찬성 202표, 반대 432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부결되었다. 게다가 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May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그 다음날인 16일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부결된 합의안을 수정하여 2019년 3월 12일 2차 승인을 요청하며, May 총리는 더 이상 합의안을 수정할 시간이 없다며 이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합의안 없이 EU를 탈퇴하는 No Deal Brexit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No Deal Brexit에 대한 안건도 부결되었다. 탈퇴 데드라인을 바로 눈앞에 남겨두고 May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를 EU에 요청했고, EU는 조건부로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그럼 영국 의회가 계속 부결시키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이슈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슈는 Backstop이다. 영국의 북아일랜드가 위치한 아일랜드 섬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이 공존하고 있다. 즉 같은 섬에 두 나라가 있는 형국이다. 현재는 EU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서로 주권이 다른 국가이지만 국경도, 관세도 없고 양국을 이동할 때에도 검문이 없이 하나의 나라와 같은 시스템이다.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한다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에서 탈퇴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물리적인 국경에서부터 상호 교류 시 발생하는 관세, 여행자 이동시 검문·검색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물리적인 국경이 생기고 인적·물적 교류에 불편이 생기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북아일랜드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 역사이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종교가 다른 아일랜드 섬 북쪽은 영국을 선택했다. 이후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둘러싸고 신교와 구교간의 충돌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1998년에 맺어진 Good Friday Agreement로 양 세력 간의 물리적 충돌은 상당히 해소되었다. 이 평화협정의 내용이 양국 간의 물리적 국경을 없애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왕래 및 교역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같이 EU 탈퇴를 하게 되면 다시 협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수면 아래도 가라앉은 종교 간의 갈등이 재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나온 방안이 Backstop인 것이다. Backstop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고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아 있는 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영국이 EU 탈퇴를 하더라도 아일랜드 섬의 두 나라는 기존과 동일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2020년 내에 아일랜드 섬의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관세동맹에 남아있고,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북아일랜드의

유혈사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EU와 May 총리는 Backstop을 합의안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북아일랜드가 빠진 브렉시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영국-EU간 합의안을 두 차례 부결하고 May 총리 불신임까지 추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No Deal Brexit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Backstop 수정안을 요구하는 영국 의회와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EU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May 총리는 결국 브렉시트 일정 연기를 EU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3월 29일로 EU 탈퇴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합의안 수정을 협의할 절대적인 시간이 없는 May 총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에 EU는 3월 21일 회원국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하게 된다. 다음 주까지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5월 22일까지 연기하고, 승인이 안 될 경우 4월 12일까지만 연기를 할 수 있다며 공을 영국으로 던졌다. 정치권에서 합의안 부결로 갈피를 못 잡는 사이 3월 23일 런던에서 브렉시트 반대와 제2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정치권 인사들로 참여했다. 또 브렉시트 관련 제2 국민투표 청원에는 47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의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BREXIT의 향후 전망

브렉시트 국민투표, EU 탈퇴 결정,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No Deal Brexit 부결, 브렉시트 일정 연기, 브렉시트 반대 시위 및 제2 국민투표 청원 등 영국의 브렉시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영국의 결정은 단순히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므로 세계는 브렉시트의 진행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2차례 부결되었지만, 이는 브렉시트 자체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합의문의 내용, 특히 Backstop에 대한 부결이다. 이는 Backstop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큰 문제없이 EU 탈퇴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브렉시트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독립요구를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다. 만약 Backstop 없이 브렉시트를 강행할 경우, 북아일랜드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테러 및 유혈사태에 대해 영국 의회 및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또 No Deal Brexit에 대해 일단 부결은 되었지만 기한 내 합의가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No Deal Brexit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영국 및 관련 국가의 혼란, 더 나아가서 무질서(chaos)가 발생할 경우 정부불신임 투표 및 조기총선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조기총선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속되는 정치혼란, 글로벌 기업의 영국 탈출, 북아일랜드 독립요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영국이 EU 탈퇴를 하고나면, 그 외 EU 회원국의 EU 탈퇴가 줄을 이을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탈퇴를 고려했지만 국가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영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EU 내 경제규모 2위인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 EU 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고, 프랑스, 덴마크 등이 연이어 탈퇴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EU는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EU를 결성했지만, 이렇게 하나 둘 회원국이 빠져나가면 결국 많은 EU 회원국이 경제위기에 봉착할 위험이 커질 것이다. 연이은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No Deal Brexit 상황 등으로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 반대, 다시 투표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제2 국민투표 청원도 470만을 넘겼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하자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투표를 치르기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준비기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발효일 이전에 투표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1차 국민투표에서 이미 브렉시트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을 어겨가며 이전 결과를 부정하는 투표를 하기는 쉽지 않다. 투표를 하더라도 브렉시트 찬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May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득실을 따져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이는 영국의 경제에 이롭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혁명을 이룩한 영국이지만 Thatcher 수상 시절에 제조업은 모두 접고 금융업 살리기에 치중한 결과 런던은 뉴욕과 더불어 세계적인 금융의 허브가 되었다. 유럽의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본사가 런던에 있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할 경우 런던에서 다른 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것이 예상되고, 그럼 결국 런던은 아무 것도 남지 않아 허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국내 제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물품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수입을 해왔는데, 브렉시트 후에는 이전의 무관세 혜택이 없어져 수입물품은 관세로 인해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고 이는 곧 서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전에 물품 사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이후 브렉시트를 실행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브렉시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총리는 사임했고, 영국과 EU와의 합의안은 영국 의회에서 거부당하고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후회하며 다시 투표하자며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마감 시한을 간신히 연장하기는 했지만, 여러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No Deal Brexit라는 최악의 악수를 두지는 않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브렉시트, 무엇이고 왜 세계적 쟁점인가?』. 서울: 책갈피, 2019.

“브렉시트.”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A0%89%EC%8B%9C%ED%8A%B8>> (2019/3/24.).

최순영. 「브렉시트의 배경과 향후 전망」.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 연구원, 2016: 24호.

<<http://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20549&fgu=002001&fty=004003>> (2019/3/13)